

# 패트법안 처리 국회 총돌사태 재연되나

### 민주, 정기국회 종료 12월 10일전 처리 목표 한국, "모든 수단 동원해 본회의 처리 막겠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됨에 따라 본회의의 상정 및 처리 절차를 눈앞에 두게 됐다.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과 사실상 연동된 검찰개혁 법안이 다음 달 3일 본회의로 넘어오면 이들 패스트트랙 법안을 정기국회 종료(12월 10일) 전에 처리한다는 것을 1차 목표로 하고 늦어도 내년 총선에 비후보자 등록 시작일(12월 17일) 전에는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본회의의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과거 패스트트랙 지정시의 총돌 사태가 재연되는 것이냐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이날 0시부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면서 "문화상 국회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런 사실을 사후 통보하는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 300명 유지 ▲지역구의 석수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 축소 ▲비례대표 의석수 47석에서 75석으로 28석 확대 ▲중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 도입 등이 골자다.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은 이 법안을 지난 4월 30일 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데 이어 지난 8월 29일 정개특위에서 의결했다. 이어 체계·지구 심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으나 국회법상 심사기간(90일)이 전날 종료되면서 이번에 본회의로 자동 부의됐다. 국회법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 시 의결에는 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며, 여야 전원(현재 295명)이 출석할 경우 148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본회의 표결 시도는 검찰개혁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오는 다음 달 3일 이후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법정 처리시한 12월 2일)이 시기적으로 함께 물러있어 실제 본회의의 상정 시점은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

민주당은 일단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 전까지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합의안 도출을 위해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매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하고 당 대표 차원의 협상 진행도 모색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국회법에 따라 표결 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당권파·정의당·평화당 + 창당 중인 대안신당)' 체널을 가동하고 의결정족수 확보 작업에도 들어갔다.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를 요구하면서 황교안 대표가 단식 투쟁 중인 한국당은 결

사 저지 방침을 밝히고 있다. 한국당에서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함께 의원직 총사퇴 등도 계속 거론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의원직 총사퇴부터 필리버스터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으로서도 '개입의 물'인 선거법을 일방 처리하는 데 부담이 적지 않은 데다, 한국당 내에서도 협상 필요성이 일부 거론되고 있어 막판에 극적으로 합의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정당 대표실에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왼쪽부터),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화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공수처법 단일안 만들자”

### 여야 '4+1 협의체' 첫 회에서 공감대 형성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이 2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단일 안으로 만들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가동된 것으로, 민주당 전 원내대표 홍영표 의원,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 김관영 의원,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이 참석했다.

김관영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핵심 3개 법안 중 선거법과 검정수사권 조정은 단일 안이 올라갔기에 (본회의에) 부의되고 상정되면 투표를 하면 그만”이라며 “공수처는 2개 법안이라 단일 안을 만드는 것이 필수 불가결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그는 “잠정적 합의안에 대해 개혁 세력이 서명해 몇 명이 찬성하는지 보여줘야 한다”며 “그걸 통해 본회의의 가결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한국당을 압박하고 협상장에 빨리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제 개정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표결에 부쳤을 때 부결 가능성이 있다는 일

부 의견이 있어 가결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원정수 확대 여부와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300명 정수 안에서 조정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한다. 한국당이 논의에 참여해 협상하면 증원 문제를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선거법을 먼저 표결하고 그 이후 공수처법과 검정수사권 조정을 표결하는 것으로 순서를 합의했다”며 “이 점에 대해 많은 분이 일부 우려하거나 다른 얘기를 하지만 홍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이 부분이 준수돼야 한다고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분당’ 예고 바른미래

### 패스트트랙 해법도 ‘따로따로’

극한 갈등을 거듭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놓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총돌 지점을 넓히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며 지난해 말 10일간 단식한 손학규 대표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적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한 의원정수 확대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의 유승민 의원은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연합뉴스

## 부장검사도 인사·재산검증 받는다

### 대검, 8번째 개혁안 발표 범죄경력·7대 비리 등 대상

앞으로 부장검사들도 보임 시 법무부의 인사·재산 검증을 받는다.

대검찰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로 인사·재산 검증 확대' 개혁안을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검의 자체 개혁안 발표는 이번이 8번째다.

현재는 검사장 보임 대상자가 청와대의 인사·재산 검증을, 차장검사 보임 대상자가 법무부의 인사·재산 검증을 받고 있다.

이를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인사·재산 검증에는 본인 및 직계 존속 등의 각종 정보가 포함된다.

검사로 신규 임용됐을 때부터 검증받는 시점까지의 재산 자료, 범죄 경력, 감사 및 징계 전력, 납세, 건강보험, 고위공직자 7대 비리 여부 등이 검증 대상이다. 7대 비리는 병역기피, 탈세, 불법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부정,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이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 내부 비리에 대해

법무부가 엄정한 감찰을 할 수 있도록 중간관리자로서 역할이 큰 부장검사까지 검증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에서 부동산·주식 등 재산 형성 과정을 포함해 엄격한 인사 검증을 함으로써 검사 보임·승급에 윤리적 기준을 높이고, 비위를 사전 예방하는 자정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감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간 간부급 관리자로써 부장 검사의 역할이 지대하기 때문에 문재의 소지가 있는 보임 대상자를 보임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검사로 신규 임용됐을 때부터 자신과 주변 관리를 엄정하고 철저히 해달라는 강력한 의사를 검찰 내부 구성원들에게 전달하는 취지도 있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지난달 1일 '특수부 축소', '외부 기관 파견검사 복귀'를 시작으로 자체 개혁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그간 ▲공개소환 전면 폐지 ▲심야조사 폐지 ▲전문공보관 도입 ▲대검 내 인권위원회 설치 ▲비위 검사 사표수리 제한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등이 개혁안에 포함됐다. /연합뉴스

##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법’ 발의 촉구

### 여야 의원들, 의외장 찾아가 건의 의외장 '1+1+a' 내달 발의 예정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법안을 발의했던 여야 의원 10명이 27일 문화상 국회의장을 찾아 관련 피해자 지원 법안의 조속한 발의를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원혜영·강창일·오제세·김민기 의원, 자유한국당 홍일표·함진규 의원, 바른미래당 이해훈·김동철 의원,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한·일 외교갈등 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외교적으로 협력하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들이 이미 많이 제출되어 있는데, 법안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종합하여 획기적인 법안을 제시하려고 한다”며 “관련 법안을 이미 제출하신 의원님들의 고견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법안에 반영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원들은 “정부가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나 국회가 먼저 법안을 마련해서 정부가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의장이 법안을 대표발의할 때 공동발의자로 참여할 뜻도 밝혔다.

문 의장은 현재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이 참여하는 ‘기억·화해 미래 재단’ 설립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1+1+a(알파)’ 방식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법안 초안 단계에서는 관련 소송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위자료·위로금 지급에 필요한 총비용이 3000억원 정도로 예상됐지만, 최종적으로는 이를 크게 웃도는 금액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의 기금 조성 시 지금은 활동이 종료된 ‘화해치유재단’의 남아있는 잔액(약 60억원)을 포함하려면 계획도 위안부 피해자 측 반대로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문 의장은 최종 법안을 마련해 내달 둘째 주에 발의를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



#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 부동산 추천 물건

- 건물**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434.44㎡(131.4평) 건물 : 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7층 **매매가 53억** 상무지구 이마트 인근 보증금 1억7천 월수익 2천5백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계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764.8㎡(231.35평) 건물 : 463.54㎡(140.22평) 지상4층 **매매가 49억** 보증금 4억 월수익 1천9백만 임방울대로 대로변 위치최상
- 건물** 광주 광산구 우산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623.8㎡(188.7평) 건물 : 1642.56㎡(496.87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32억** 현 사우나운영중, 세계수영대회 선수촌아파트 앞.
- 건물** 광주 동구 학동 (2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토지 : 770.1㎡(232.95평) 건물 : 1458.86㎡(441.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28억** 학동 아이파크 인근 대로변
- 건물** 광주 광산구 신가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900㎡(272평) 건물 : 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 36억** 전시광고효과 좋음, 신가재개발부근, 투자적합
- 건물** 광주 광산구 삼계동 (계획관리지역) 토지 : 4556㎡(1378평) 건물 : 2766.44㎡(836.844평) 지하1층 지상3층 **매매가 40억** 현 요양원 운영중, 빛그린국가 산업단지 인근
- 건물** 광주 남구 주월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306㎡(64.61평) 건물 : 494.4㎡(149.56평) 지상4층 **매매가 9억3천만**원 삼육고 인근 푸른길도서관 앞 공실없음

"상무지구 · 법원 앞 수익률,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 경매 추천 물건

- 공 장** 광주 광산구 고동동 토지 : 1705.3㎡(515.9평) 건물 : 1358.46㎡(410.9평) 감정가 13억1천2백만원 최저가 (70%) 9억1천8백5십만원
- 주 택** 광주 북구 장등동 41번지 토지 : 598㎡(180.9평) 건물 : 263.04㎡(79.6평) 지상3층 감정가 4억7천8백만원 최저가 3억3천5백만원
- 주 택** 광주 광산구 수완동 947번지 토지 : 337.476㎡(102.089평) 건물 : 298.282㎡(90.23평) 지하1층 지상2층 감정가 10억 3천2백3십만원
- 주 택** 광주 광산구 수완동 946-26 토지 : 354.615㎡(107.271평) 건물 : 329.717㎡(99.739평) 지하1층 지상2층 감정가 10억2천6백5십만원
- 아 파트** 광주 서구 쌍촌동 푸르지오 47평형 감정가 7억2천1백만원 최저가 5억4백7십만원
- 아 파트** 광주 남구 봉선동 더셀2단지 54평형 감정가 11억2천6백만원 최저가 7억8천8백만원
- 아 파트** 광주 북구 용봉동 쌍용에가 54평형 감정가 5억6천만원 최저가 3억9천2백만원
- 아 파트** 광주 북구 운암동 벽산블루밍2차 56평형 감정가 5억3천만원 최저가 3억7천1백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